

# 오피니언

## 光日春秋

이돈희



제도적 교육의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경쟁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고 여기는 찬성론자가 있기도 하고, 반면에 비록 일시적인 효율성과 외형상의 성과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경쟁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본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성과를 파괴해버리는 위험한 요소를 잠복해 놓고 있다고 보는 반대론자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경쟁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급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해와 수용의 방식이 달라진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은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적이냐 상벌로써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 수준'의 경쟁, 자녀들의 좋은 성적·좋은 학교·좋은 진로를 위하여 관심과 비용을 쏟아붓는 '학부모 수준'의 경쟁, 그리고 보수·승진·포상·징벌 등으로 근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교사 수준'의 경쟁, 또한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지는 학교·교육청·국가 등의 '정책 수준'의 경쟁으로 구분된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교

육수요자'로 분류될 수 있고, 학교·교육청·국가는 '교육담당자'로 분류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은 그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원하거나 않거나 간에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 교육에서 경쟁은 악덕인가?

성적이 매겨지고 진학에 성공과 실패가 있고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는 취업과 생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칭찬과 징벌 등으로 그들을 경쟁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학교이다. 점수를 잘 따서 성적을 좋게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사회적 출세의 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생애를 세인들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한다.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들도 관심과 비용을 투자한다. 그러나 위대한 교육사상가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비경쟁의 굴레 속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과 개성이 자유

스럽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오늘의 교육은 어디에서나 이상과 현실에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은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악덕은 아니며, 근원적으로 교육의 장에서 제거해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의 대입제도의 내신 성적과 같이 '너와 나'를 한 줄로 세우는 '일원적' 경쟁구조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에게 해어날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한다. 모두가 비좁은 한 골목으로 가면 질식하는 자가 생긴다. 반면에 "너는 그것을 잘하느냐, 나는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식의 '다원적' 경쟁구조는 선전의 폭을 넓히고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으므로, 비경쟁의 경쟁과 치명적 실패의 숙명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잠재력의 자유로운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담당자의 측에서도 경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아무리 교사들의 급이나 승진이 기본적으로 연공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무·보직·기회·성과급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보상의 체계에는 경쟁의 원리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배한다. 최근에는 교사의 업무평가·학생의 교

사선택·연봉계약 등 기본적으로 교사들을 능력경쟁의 구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경쟁만이 아니라, 나라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관청을 경쟁 구조 속에서 관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쟁구조로 인하여 가장 구체적인 긴장과 압력을 받는 집단은 전문직으로서 전 생애를 교단에서 바치게 되는 교사집단이며, 바로 교사집단이 실제로 경쟁체제의 도입에 가장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종사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경쟁풍토 속에 있게 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들의 직업적 사명감과 예속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육자들에게 사명감과 윤리를 강조해 왔고, 지금도 교직은 도덕적 요구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이다. 만약에 교사집단이 이러한 직업윤리의 특성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수호하여 실천하는 결연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육담당자들에게 경쟁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교육종사자들에게 경쟁체제와 직업윤리, 어느 한쪽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며, 모두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족사관고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감사원 지자체 전면 감사 비리 근절 계기로

감사원이 16일 지자체 감사 정례회, 단체장 비리 주민 공개, 수혜복구 실행 및 국고보조금 지원 실행 특감, 지방공기업 전면 특감 등 지자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사실상 지자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민선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에 가장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선심성 행정, 반말한 인사·초직, 소극적·편의주의적 행태 등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형성을 낭비하는 지자체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각종 공사와 인사를 둘러싼 비리 등 단체장이 연루된 불법·부당행위가 심심찮게 드러나 자치행정 발전을 저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지자체의 각종 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감사원의 결정을 일단 환영한

다. 지자체의 비리와 비효율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지자체 자체나 지방의회 감사만으로는 단체장의 독주나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다.

다만, 감사원의 전면감사가 감사권을 내세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의 반발과 불복 등으로 비리를 근절시키기는커녕 행정력만 낭비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실시돼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데 있어 한결의 의문도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 감사가 지자체의 고질적인 비리와 비효율성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대법원장 '범조비리' 사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범조비리와 관련, 1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범조비리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유관 전 대법원장이 1995년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졌던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 사건'으로 발표한 이후 두번째다. 그러나 법관의 비리와 관련해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이번 범조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원 수뇌부의 유례없는 대국민 사과는 우리의 사법사에 씻지 못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법과 양심의 부부'라 할 사법부의 권위가 자칫처럼 추락할 적 없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의 정도가 재판 본래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해 재판 불복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만큼 사법부 최대의 위기가 할 수 있다.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이 법관 스스로에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

다.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의 해묵은 관행을 용납하지 않고 법관들에게 성직자 범조비리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유관 전 대법원장이 1995년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졌던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 사건'으로 발표한 이후 두번째다. 그러나 법관의 비리와 관련해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이번 범조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범조비리 근절대책으로 법관책임유심사 강화와 법관 징계시효 연장, 법관감찰 강화, 법관징계위 의부인사 참여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만 맡겨서는 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범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사법부는 수많은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구두선'에 그쳐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사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의 성찬'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한다.

## 無等鼓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광복의 달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동북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독도 영유권 트집에 이는 일본의 도발적 역사 왜곡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고이즈미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올해도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울에서 따

더 큰 문제는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저항이다.

해묵은 일을 지금에 다시 꺼내 공언히 국론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한 우리 현대사는 부끄러운 그 자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갈 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군사독재에 아

무하고 정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제 한반도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최대 폭장치대로 일제의 수탈이 집중됐던 광

주·전남에도 친일파 소유 재산이 상당 수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친일잔재 청산은 영원히 물 건너 갈지 모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갈수록 우경화, 군사대국화 되어가는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도 일제잔재 청산은 더욱 절실한 과제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 친일잔재 청산



## 기고



남상창

향우님!  
지금 전남은 이글거리는 태양아래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피우기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해안의 해수욕장은 수도권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공무원들도 나서 교통정리는 물론 관광객 편의를 돕느라 비상근무까지 할 정도입니다. 당달아 모두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물론 차량임대업, 식당 등 전남도의 서남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우님!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기분 좋은 소

니다. '녹색의 땅' 전남을 가꿀 수 있도록 향우님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고향 사랑 아닐까요?

지난날 겪었던 가난의 설움을 결코 잊지 않으셨지요. 전남발전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투자도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쯤 전남의 관광명소를 찾아 주고 주위 분들에게 홍보해 관광전남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섬의 2/3, 해안선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해조류는 85%, 전일염은 85.6%를 생산하고 있어 이를 산업화하면 얼마든

### 올여름 고향에는 다녀가셨나요?

식입니까? 고향소식을 마음속에만 담아 두지 못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제 고향은 전국에서 제일 날찍한 해수욕장을 가진 신안 입자도입니다.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 감칠맛 나는 남도 먹거리에 막걸리 한 잔 곁들여 고향의 정에 거나하게 취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는 향우님들이 고향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해 전남은 가난하나고 물가 전에 고향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 하시면서 앞장서고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남은 오염되지 않은 땅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의 자산들이 넘쳐납니다. 웰빙시대 전남의 '성장 동력'입니다.

<전남도 홍보지원담당>

## 기고



김화진

지난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환수 될 때 많은 언론들이 환영을 했으며 전 현직 국방부 장관들도 국민적 반응을 지켜보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 작전권 환수가 된 것은 제 2의 창군이라고 극찬했으며 더욱더 노력하여 급적 빠른 시기에 전시작전권도 환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수 언론의 사실과 기사를 참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1994년 12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풍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이 없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당시의 기사가 말해 주듯이 1990년 초부터 착실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1994년 평시작전권이 환수되고 더 나아가 2000년대 이전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한미간 군사적 계획하에 구체적 플랜으로 실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의 평시·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문제의 최 일선 책임자들이었던 국방부 장관들이 지금 군복을 다시 입고 평온한 국민적 분위기를 불안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사적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국민들

### 전 국방부 장관님들 왜 그러십니까?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같은 날짜 해설기사에서도 "많은 군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진정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지금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당시에 침묵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야단법석을 떨며 한미간 확고한 후호적동맹 관계마저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요소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준비 없이 졸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 함 말 못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로서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욕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반대적 견해와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기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더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였으면 한다. 2009년이든 2012년이든 아직 그 시기 조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 좀 더 어른스럽게 지켜보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조언하며 도와 주는 전직 국방부 장관들과 한나라당의 사고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남구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인터넷 쇼핑물 무료배송에 현혹되지 말자

인터넷 구매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달해준다가에 웃을 샀다.

웃을 받고보니 크기도 원하는 것이 아닌 데다 당초 기대했던 웃과 차이가 많아 반품을 요구하고 웃을 보냈더니 해당 업체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문제는 교환을 요구하지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그 배송비와 다시 물건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를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다니 처음에 무료 배송을 했던 그 배송비를 입금시켜야 환불해준다고 했다. 만원도 안되는 웃을 구

입하고 배송비를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웃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와 허술한 제품으로 인해 무료 배송비까지 뒤집어 쓴 셈인데 이것이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의 무료 배송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료 배송이라는 말로 소비자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의 불만을 없애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김지훈·나주시 노인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제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2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